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

북한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다. 자료 부족은 다른 분야도 심각하지만 경제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 자료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그나마 입수할 수 있는 통계라 해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다. 비수량적 자료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결국 자료와 다시 한 번 부딪쳐야 한다.

문헌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공식 출판된 문헌, 이른바 원전이다. 북한 경제 연구에서 객관성과 실증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 대한 정독이 필수적이다. 물론 공식 간행물 강독이 북한 경제 이해의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의 공식 문헌들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낮은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60년대 이후, 북한에서 출판되는 문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의 가치가 크게 감소했다.¹⁾

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문헌의 경우, 통계를 비롯해 북한의 구체적인 경제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설명이나 주장을 펼칠 뿐이다. 또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읽는 사람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하기 십상이다.

사실 학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그다지 크지 않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식적인 매체에서 글로 표출하는 데 제약이 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 개혁·개방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현실은 공식적인 제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문헌들이 선전선동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학자들은 당면한 제반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게다가 이를 일선 경제현장의 실무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학자들 나름대로 공리를 해야 한다.

이 글은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 전문잡지인 『경제연구』를 어떻게 읽을지를 다룬다. 공식 문헌에 대한 정독을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료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노력에 의해 발굴되고 생산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해석이란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1)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 북한대학원 위임, 『북한연구방법론』(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3), 130쪽.

다만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 때문에 『경제연구』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고, 주로 전반적인 경제정책기조와 개혁·개방 관련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경제연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연구』에 대한 정독을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경제연구』는 어떤 잡지인지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북한은 『경제연구』를 과학원 경제연구소 과학이론 잡지라고 소개하고 있다.²⁾ 이 잡지는 “맑스-레닌주의 경제이론의 일반적 원칙과 그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현명한 경제정책과 그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이론화한 논문들을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천명한 경제과학논문들을 게재” 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실천적인 경제문제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³⁾ 아울러 이 잡지 논문의 기고자들을 “경제학자들과 교육자 및 경제기관 실무일군들과 광범한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된 독자층은 “경제관제 일군, 과학실무일군들을 포함한 경제학도”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연구』는 계간지로서 국내에서 확인한 바로는 1950년대 초중반에 창간되어 1967년까지 발간된 뒤,⁴⁾ 19년간 휴간되었다. 그러다가 1986년에 복간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 국내에는 1956년 1호부터

2) 1950년대에는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과학이론 잡지.

3) 예컨대 1960년 각호 참조. 1960년대에 간행된 『경제연구』 각호는 대부분 잡지 말미에 『경제연구』가 어떤 잡지인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4)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956년 4월에 발행된 것인데 이 해에는 1, 2호만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1967년 4호가 누계 51호로 표기되어 있어 창간 시기는 195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1967년 4호까지 일부만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존재한다. 인쇄물은 1986년도 분부터 존재한다. 발행처는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93년 1호부터 과학백과사전출판사로 변경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제연구』 가운데 1986년 복간호부터 2008년 4호까지 총 23년분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북한 원전에 나오는 조선어 표기법 가운데 한글 표기법과 상이한 것은 거의 다 한글 표기법으로 바꾸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⁷⁾

2. 자료 발굴을 위한 몇 가지 지침

1) 당위적 표현으로부터 현실을 유추

북한 문헌들은 공식적인 제도와 괴리되는 현실의 모습, 특히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당위적 표현과 명령적 표현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로부터 북한의 현실을 암시받을 수 있다. 때로는 실태에 대한 새터민의 증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관료들의 고민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상을 없애야

5) 발간이 중단된 1967년 4호는 누계 51호이고, 복간된 1986년 1호는 누계 52호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1968년부터 1985년까지 19년간 발행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다만 1986년에는 1, 2호만 발행되었고 1987년부터 지금까지 연 4회 발행되고 있다.

7) 필자의 성명과 논문의 제목만 그대로 두고 본문은 모두 바꾸었다.

한다(통제해야 한다)”,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표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이 번 외화를 무역은행에 집중시키고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쓰도록 하며 국가의 통제 밖에서 외화거래를 하거나 외화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며,⁸⁾ 특히 국내에서 외화를 유통시키거나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외화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는 것⁹⁾

이 문장은 국가가 외화를 관리·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암시한다. 실제로 국내의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은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특히 내각의 통제에서 벗어난 당경제, 군경제 등 이른바 특수경제의 출현으로 국가의 중앙집중적 외화관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¹⁰⁾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개별적 부문과 단위들이 제멋대로 계획의 조절이나 추가계획을 요구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¹¹⁾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개별적 단위들에서 생산지표를 변동시켜

-
- 8) 경제연구 게재 논문의 구절 인용에서 고딕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이하 동일.
 - 9) 고재환, “화폐류통을 공고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 『경제연구』, 1991년 제2호, 45쪽.
 - 10) 자세한 것은 예를 들면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 연구”(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80~89쪽 참조.
 - 11) 리동구,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 『경제연구』, 1998년 제4호, 12쪽.

내려 보내는 무책임한 현상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¹²⁾

이 문장들은 계획 작성에서 중앙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기업의 사실상의 자율성이 확대된 현실을 암시한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상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대해 중간감독기관이나 해당 기업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따라서 최초의 계획이 다시 수정(조절)되는 경우는 허다하다.¹³⁾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한다.

오늘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자기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하여서만 화폐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 기관, 기업소들 사이의 화폐거래를 주로 무현금결제로 하는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들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몰자거래를 하는 현상을 철저히 막을 수 있다.¹⁴⁾

위의 문장은 기업이 불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터민들의 증언을 확인해주고 있다. 필자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¹⁵⁾ 결과, 공장·기업소의

12) 정영섭, “생산의 전문화는 공장, 기업소조직의 중요한 원칙,”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18쪽.

13) 예컨대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학위논문, 2003), 103~111쪽 참조.

14) 홍영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006년 제4호, 26~27쪽.

15) 7·1조치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필자가 2005년 12월에

원자재 조달 중 현금결제 비중은 평균 51.9%로 나타났다. 분포로 따지면 90%(8명, 25.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6명, 19.4%)였다. 다음에는 “……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에서 실태를 유추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외화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면 우선 수입허가제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허가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설비, 물자만을 수입하도록 외화지출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물질을 수입하려 할 때에는 국가에서 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⁶⁾

외부세계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굳이 강조하는 것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조는 경제위기 이후 무역의 분권화가 진전되고, 또한 합법적인 무역과 불법적인 무역이 뒤엉키면서 국가가 무역, 특히 수입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암시한다. 다음은 농업 부문의 사례를 소개한다.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모든 양곡을 국가 수중에 장악하여 수매받기 위한 사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 부문의 매 생산단위들에서 생산된 양곡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국가에 수매하여야 할 양곡량을 바로정하고 그것이 철저히 국가 수중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 밖의 기타 모든

실시한 설문조사.

16) 최영옥, “대외무역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제2호, 41쪽.

단위들에서 생산되는 양곡과 수입양곡들을 모두 장악하고 그 소비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양정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¹⁷⁾

이 서술은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국가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함에 따라 식량의 공식적인 생산·분배·유통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 즉 농업 부문도 국가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암시한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식량 가운데 일부가 공식적인 수매체계 밖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부문 이외의 기관, 기업소 등에서 생산된 식량, 그리고 수입된 식량 등과 함께 합법적·불법적 시장거래를 재생산하고 있다.

2) 모순성의 포착을 통한 올바른 해석

북한 문헌을 읽다 보면 다양한 차원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제목과 본문 내용의 불일치가 종종 눈에 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필자가 주장·강조하고 싶은 것과 논문 제목의 모순성이다. 아울러 개념과 내용 간의 모순성, 표현과 내용 간의 모순성, 서술 내용 간의 모순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성은 대개 표현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모순성을 포착하고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짚어봐야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발굴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즉 제목과 내용의 모순성을 살펴보자. 1988년에 발표된 어느 논문¹⁸⁾은 가격의 일원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합

17) 지정희, “수매량정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008년 제4호, 35쪽.

리적인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가적 소유 부문이 아니라 협동적 소유 부문에서 수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계획 외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적 차원 혹은 개별 생산단위 차원에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상의 시장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제목은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로 되어 있다.

다음에는 후자를 살펴보자. 북한에서 공업관리의 핵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제 사례인데 여기서는 다소 특이한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제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벌려나가는 사업체제이다. …… 둘째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제이다. …… 셋째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체제이다. …… 넷째로 과학기술과 생산을 옹계 결합시키는 사업체제이다. …… 다섯째로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여 생산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체제이다.¹⁹⁾

대안의 사업체제에 대한 위의 설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째 항목, 즉 경제적 공간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1961년 고(故)

18) 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1988년 제2호.

19) 리승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제를 창시하신 불멸의 령도업적,” 『경제연구』, 2005년 제2호, 6쪽.

김일성 주석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안할 당시는 물론 1980년대의 공식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없던 대목²⁰⁾이다.²¹⁾ 이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다같이 보장하는 방향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질서,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상업적 체계를 통하여 공급하여 생산에 대한 보장 사업을 하는 질서, 그리고 노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력조치를 하는 질서, 노동보수공간과 재정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기업을 독립채산제원칙에서 관리 운영하는 정연한 질서가 수립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한다.²²⁾

즉, 생산량과 같은 양적 지표뿐 아니라 (원가, 가격, 수익성 등과 같은) 질적 지표를 공히 중시하고 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기업을 독립채산제 원칙하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른바 경제개혁적 정책기조를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기적 성격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런데도 이것이 경제위기 이후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요소로 편입되었다. 상기 논문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안의 사업

20) 실제로 1985년에 간행된 『경제사전』을 보면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그 어느 곳에서 경제적 공간의 이용이라는 표현과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1) 물론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용에 경제적 공간의 이용을 포함시킨 것은 『경제연구』의 상기 논문이 처음은 아니다. 예컨대 1992년에 간행된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용에 경제적 공간의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22) 리승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시하신 불멸의 령도업적,” 6쪽.

체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는 경제관리형태”인데도 사회주의 제도의 과도기적 성격에 맞는 요소를 포함하는 모순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학자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정 일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다. 그는 “대안의 사업체제는 경제적 공간을 옹호하여 생산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체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²³⁾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위원장의 해석에 의해 대안의 사업체제는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 밑에 기업관리의 전 과정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데 기초하여 경제적 공간을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의 계획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수단”²⁴⁾으로 새롭게 태어났던 것이다.

한편 개념과 내용의 모순도 종종 발견된다. 사실 북한 문헌을 읽다 보면 문구, 특히 정책적 개념과 관련된 문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 제도가 개혁 혹은 개혁적 조치임을 웬만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혁이라는 표현 뿐 아니라 분권화라는 표현도 터부시되어 있다.

새로운 무역체계가…… 결코 무역의 자유화나 지방분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²⁵⁾

23)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 97쪽.

24) 위의 책, 98쪽.

25)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31쪽.

1991년 말에 등장한 ‘새로운 무역체계’에 대해 상기와 같이 서술했다. 하지만 이는 강변에 불과하다. 이 논문의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무역체계는 생산자들이 대외무역을 직접 하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이며…… 자기 부문,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하는 무역 체계와 방법”²⁶⁾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부문과 지방에 대외무역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한 무역의 분권화 조치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개념과 내용의 불일치의 또 다른 예로 부동산 사용료를 지적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경제연구』는 “부동산사용료는 자본주의 사회의 세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²⁷⁾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같은 글에서 부동산 사용료에 대해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인이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한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돈”이며 “국가 예산수입의 보충적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응당한 의무”²⁸⁾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사용료는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세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 물론 북한은 1970년대에 세금을 공식 폐지한 이후, 세금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산수입, 예산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세입, 세출과 전혀 다르지 않다.

26) 위의 글, 30쪽.

27) 리동규,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 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4호, 31쪽.

28) 위의 글, 31~32쪽.

3) 용어들에 대한 북한적 맥락에서의 해석

몇몇 용어들은 남한, 혹은 자본주의적 맥락에서 해석하면 그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북한적 맥락, 북한의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달리 보면 용어에 대해 북한 당국 및 학자들이 자신들 고유의 의미를 부여한 경우이다.

『경제연구』를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의 하나가 ‘예비’이다. 예비를 동원하는 데 힘을 쏟아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예비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예비’라는 식으로 하나의 형용어가 예비 앞에 붙는다. 내부예비, 지방예비, 수출예비, 재정예비, 화폐예비, 생산예비 등과 같은 식이다.

내부예비는 잠재해 있는 생산요소들을 동원 이용하여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이용형태에 따라 이미 이용되고 있는 생산요소들의 보다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이용을 통하여 동원할 수 있는 것과 재생산과정에 쓰이지 않고 있던 원료, 자재, 노력 등을 새로 인입함으로써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갈라볼 수 있다.²⁹⁾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예비라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가깝다. 후자의 경우가 통상 상징할 수 있는 예비의 개념에 가깝다. 이 경우 의문이 하나 떠오를 수 있다. 극심한 부족의 상황에서 도대체 예비라는 것이 남아 있을까. 물론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족과 낭비의 공존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라는 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29) 김균주, “지방공업의 발전과 내부예비의 동원,” 『경제연구』, 1987년 제3호, 25쪽.

않다. 그렇다고 해도 예비를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 및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예비의 동원을 강조한다.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연구』를 조금 꼼꼼하게 읽다 보면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예비의 동원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대부분 개별경제주체에 대해 ‘자력갱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건설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중요하게 내부예비를 얼마나 남김없이 동원이용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³⁰⁾

상업기업소 원료기지 조성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력갱생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이용(하는 것)³¹⁾

혁명적 군인정신이 국가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예비 동원이용의 결정적 담보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생산예비를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기 때문이다.³²⁾

상업부문에서 진행되는 가공식료품의 생산공급사업은 국가로부터 원료와 자재, 로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³³⁾

30) 조원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에서 동원하여야할 인민경제내부예비의 내용,” 『경제연구』, 1995년 제2호, 22쪽.

31) 리동현, “상업기업소에서의 원료기지 조성과 그 중요 특성,” 『경제연구』, 1995년 제2호, 41~42쪽.

32) 김춘호, “국가 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예비 동원리용의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05년 제4호, 10쪽.

요컨대 개별 기관, 기업소 등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자금 등 생산의 제반 조건(input)을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러한 조건의 취득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개별 기관, 기업소가 계획경제 내가 아니면 어디에서 원자재, 자금 등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 다른 기업소, 개인, 해외, 각종 불법적 공간 등 포괄적으로 보아 시장경제 영역밖에는 없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시장을 통해 해결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비’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한편 예비, 자력갱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약간 상이한 범주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 ‘계획 외 경제활동’(계획 외 생산·유통)이다. 이는 계획경제 영역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즉 국가 계획당국의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 개별 경제단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 즉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시장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직매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상품의 가격은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제정하는 소비품의 소비가격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이는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일정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직매점가격 제정대상은 철저히 공장, 기업소의 …… 부산물과 폐설물, 지방의 유휴자재를 이용하여 계획 외에 생산한 소비품에 국한시켜야 한다.³⁴⁾

33) 김성이, “가공식료품의 생산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상업 발전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1992년 제1호, 50쪽.

34) 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33쪽.

가내편의봉사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는 국가의 추가적인 투자가 없이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인민소비품생산과 편의봉사를 진행하는 생산봉사활동이라는데 있다. …… 인민소비품생산과 편의봉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 노력 등을 국가의 투자가 아니라 생산자와 봉사자 자신이 자체로 해결한다. …… 가내편의봉사에서의 생산물과 편의봉사업종들은 국가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및 봉사로 한다.³⁵⁾

이러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종종 ‘계획 외 생산·유통’ 활동으로 불리는 범주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 원칙에 의해, 사실상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영역이다. 이미 1980년 말부터 등장한 이 범주에는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 그리고 직매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⁶⁾

또 다른 예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들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혹은 개선)적 조치를 취할 때 그 정당성의 근거, 합리화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이다. 2000년대 들어 그러한 경향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경제개혁(혹은 개선)적 조치를 다루는 논문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내세웠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정책,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 내에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그 논문에서 필자가 주장·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개혁적 기조라고 해석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35) 전숙영, “가내편의봉사의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1990년 제4호, 12~14쪽.

36) 2000년대 7·1조치 이후 기업경영실적 평가 지표로서 새롭게 등장한 ‘변수입 지표’는 기업의 계획 내 경제활동뿐 아니라 계획 외 경제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과 대비되는 개념 내지 용어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대표적이고 때로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 본성적 요구, 본질적 특성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반개혁적·보수적 정책기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이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으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³⁷⁾

협동경리에서 수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자유수매식료품과 농부업생산물에 대하여 일원화, 유일가격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체로 정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³⁸⁾

사회주의 사회에 있게 되는 개인부업과 같은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노동형태이다.³⁹⁾

특히 최고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교시를 내린 바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빈번하게 별다른 고민 없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

37) 유시영, “연합기업소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경제연구』, 1987년 제1호, 27쪽.

38) 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31쪽.

39) 윤애순, “사회주의 노동생활의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경제연구』, 1993년 제4호, 15쪽.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20쪽).⁴⁰⁾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적 특징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김정일선집』 11권, 344쪽).⁴¹⁾

그렇다면 과도기란 무엇인가. 과도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과도기,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라는 뜻이다. 북한 공식 문헌의 설명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우월한 사회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 비해서는 미숙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생산력의 발전수준, 계급적 관계와 노동의 성격 등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표현된다.⁴²⁾ 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 또한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사회주의 사회가 이러한 측면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적·절충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40) 한득보, “원료, 자재의 합리적 리용에 작용하는 중요지표들과 경제적 공간,” 『경제연구』, 1987년 제2호, 39쪽에서 재인용.

41) 박홍엽, “국영기업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의 사회경제적 기초,” 『경제연구』, 2001년 3호, 9쪽에서 재인용.

42) 『경제사전』,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733쪽.

경제개혁적 요소 도입의 근거로서 활용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3. 자료 발굴 사례 1: 경제정책 기초

이제부터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료를 직접 발굴, 생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결합이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기초, 경제운영에 대한 당국의 생각, 의도 등 경제 분야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1) 국방공업

2000년대의 『경제연구』를 순차적으로 읽다 보면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보면 국방공업 우선정책이고, 넓게 보면 선군시대의 경제정책기조이다. 『경제연구』가 국방공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⁴³⁾이고 그 흐름은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2008년까지 이어졌다. 국방공업이나 선군 혹은 선군시대가 포함된 논문은 2003년 1호부터 2008년 4호까지 보면 두 차례(2007년 1호와 2008년 1호)를 제외하고는 매호에 등장한다. 각호마다 적을 때는 1편에서 많을 때는 4편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2편 정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결국 2003년 이후로 북한의 경제운영에서 국방공업 우선정책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43) 그 이전에 2001년 제1호와 제2호에 아주 간략하게 국방공업, 선군정치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다.

있다.

사실 국방공업이라는 용어·범주는 2000년대에 새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연구』가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이 범주의 의미, 역할 등에 대해 이론을 전개하고 이론을 심화발전시키는 임무를 부여 받았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론화 초기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논리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이것은 선군 시대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⁴⁴⁾

이론화가 좀 더 진전되면 국방공업 우선론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히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는 국사 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입니다. 군사와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경제강국도 건설할 수 없으며 나라와 인민의 안녕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입니다(『김정일선집』 14권, 457쪽).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으로 천명하셨다.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 건설노선의 가장 중요한 본

44) 오선희, “공화국의 위력을 떨치는데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과업,” 『경제연구』, 2003년 제1호, 7쪽.

질적 내용은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는 원칙에서 국가의 경제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먼저 조성하고 노력, 설비, 자재, 전력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⁴⁵⁾

이러한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경제노선은 북한이 1950년대 중후반부터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나아가 기존의 중공업 우선전략과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해진다.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구별되는 별개의 노선이 아니며 그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노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계승하고 있다.⁴⁶⁾

국방공업은 전반적 인민경제의 핵심, 최고 정수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에 와서는 국방공업이 전반적 경제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국방공업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중공업의 빠른 발전을 가져온다.⁴⁷⁾

45)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선,” 『경제연구』, 2003년 제2호, 5쪽.

46) 박명혁,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9쪽.

47)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선,” 7쪽.

국방공업 이론화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북한은 기존에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까지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사회적 생산을 두 부류, 즉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으로 구분했으나 이제는 국방공업 부문도 별도의 부류로 파악해 사회적 생산은 세 부류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축적에 대한 이론도 새롭게 개편했다.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 학자들이 국방공업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이다.

사회생산물의 현물형태에 관한 맑스의 견해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 사회생산물의 현물형태를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도 세 가지 부류로 즉 군수품을 생산하는 부문,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⁴⁸⁾

군수생산물을 생산하는 부문을 독자적인 사회적 생산부류로 구분 …… 이로부터 사회적 생산은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현물소재적 내용과 용도에 따라 군수생산부문, 생산수단생산부문, 소비재생산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축적에 대한 개념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장래행복을 위하여 국민소득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되

48) 심은심, “선군시대 재생산의 몇 가지 이론 문제,” 『경제연구』, 2004년 2호, 11~12쪽.

49) 한규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에 맞게 사회적 생산 부류들 사이의 균형설정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6년 제1호, 22쪽.

어야 한다. 그리고 축적의 형태에서 생산 확대에 둘러지는 생산축적을 기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수물자의 저장과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설비, 자재, 식량 등의 예비를 조성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 선군시대에는 지난시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축적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은 선군시대에는 군수품 저장에 의한 축적이 늘어나며 국방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적 축적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⁵⁰⁾

2) 화폐금융 및 재정

화폐금융 및 재정 분야는 1990년대 들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6년, 『경제연구』 복간호였지만 이후 5년 정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1년에 다시 등장했고, 1993년부터는 거의 매년⁵¹⁾ 1~2편씩, 많을 때는 3편이나 논문이 등장했다. 이는 북한경제의 하향추세가 뚜렷해진 1980년대 후반,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부각된 새로운 경제적 고민이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즉,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달리 보면 경제구조가 변화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전후해 계획경제가 점차 기능이 약화되고, 비공식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상품화폐관계가 발달되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국민경제 내에서 금융의 지위가 상승했고, 금융과 재정의 연관성이 높아졌다.

50) 심은심, “선군시대 재생산의 몇 가지 리론 문제,” 13쪽.

51) 1993년부터 2008년까지 화폐금융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해는 1998, 2003년 정도이다.

이 분야에 대한 『경제연구』의 논문을 살펴보면 최소한 학자들 차원에서는 이 분야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화폐금융 및 재정 분야가 다른 경제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른 분야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경제연구』를 읽어보면 이 분야에서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무엇인지 끄집어낼 수 있다.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인데, 물론 이 두 가지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보아 하나의 문제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다. 첫째, 화폐 구매력 저하, 즉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둘째, 국가 재정수입 감소 문제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찍이 1986년부터 등장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1986년의 논문에서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되고,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08년 논문에서도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화폐유통의 공고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모든 국가경제기관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한다면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는 문제의 해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1986년).⁵²⁾

모든 경제일꾼들은……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08년).⁵³⁾

52) 리원경, “사회주의하에서의 화폐유통 법칙과 화폐유통,” 『경제연구』, 1986년 제1호(온라인 자료).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국가 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인 화폐의 퇴장(민간부문에의 침전)은 직접적으로 국가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화폐유통의 공고성은 또한 나라의 재정토대를 강화하고 전반적 나라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화폐유통의 안정성이 사회주의국가 예산수입과 나라의 재정토대를 강화하는 기초로 되기 때문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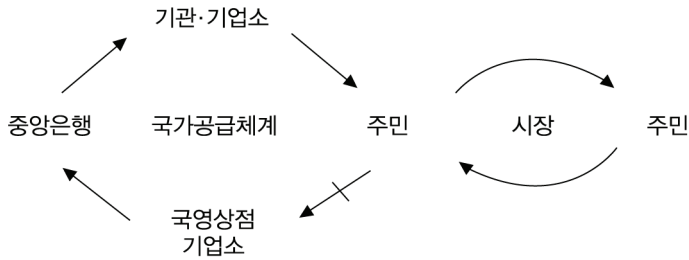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가. 현상적으로는 유통화폐량이 필요화폐량보다 많은 것, 즉 통화과잉(monetary overhang) 현상이다. 그리고 통화과잉은 화폐량과 상품량 사이, 주민의 화폐수입과 지출 사이의 불일치, 국가 전체적으로는 화폐방출과 화폐회수 간의 불일치, 상품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 통화과잉 현상은 주민 수준에서의 현금 침전을 수반한다.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국영 상점망이 아니라 암시장(종합시장)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에 화폐가 환류(회수)되지 않은 채 주민들 사이에 쌓여간다. 개인들이 보유한 화폐가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원자재 공급 체계가 흔들리면서 기업소 간에 비공식적인 원자재 거래를 위한 현금거래, 현금 보유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 국내에서 외화를 유통시키거나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외화를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

53) 강경희,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2008년 제4호, 53쪽.

54) 최경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화폐유통 공고화의 기본방도,” 『경제연구』, 1993년 제3호, 37쪽.

<그림 1> 북한의 화폐 유통과정



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냄으로써 통화팽창을 부추긴 것도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아래의 구절들은 이러한 메커니즘 및 <그림 1>⁵⁵⁾에 대한 상상에 도움을 준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조차 하다.

현금류통 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현금운동의 정체와 현금운동과 상품운동의 배리, 주민수중에서의 현금의 침전과 현금의 지역적 편차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⁵⁶⁾

55) 『경제연구』에 있는 다음 구절은 북한 당국이 <그림 1>의 왼쪽에 있는 정상적인 화폐순환과정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은행권의 류통은 ‘은행 - 기관, 기업소 - 주민 - 상업봉사기관 - 은행’의 유통환절을 순조롭게 단순히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원운동을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양선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은행권의 발행과 그 규모규정 방법론,” 『경제연구』, 1995년 제1호, 32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은행권의 운동은 ‘은행 - 근로자들의 화폐수입 - 상업망에서의 화폐수입의 실현 - 은행’의 과정을 밟게 되며.” 오선희, “유휴화폐자금과 그 은행자금화,” 『경제연구』, 2004년 제4호, 24쪽.

56) 최경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화폐류통 공고화의 기본방도,” 37~40쪽.

현실적인 화폐 유통과정을 들여다보면 일부 현금들이 개인 수증이나 기관, 기업소의 금고들에 머물러 있게 된다.⁵⁷⁾

주민 수증에서 늘어나는 현금량이 행정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시장⁵⁸⁾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시장 동태가 나라의 통화조절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59)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으로 이어진다. 『경제연구』에 실린 글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당국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대책은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화폐금융 분야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해결방안을 제대로 실천·실행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첫째, 상품공급의 확대(공급 정상화)이다. 이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국가가 2000년대 들어, 특히 7·1조치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국영상점을 무역회사 등이 인수하게 해 수입상품을 상점에 넣고 주민들에게 판매⁶⁰⁾하는 등 이른바 국영상점망의 시장화를 무릅

57) 리원경, “사회주의하에서의 화폐유통 법칙과 화폐유통.”

58) 2003년부터 합병화된 암시장을 한국에서는 종합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지역시장이라 칭하고 있다.

59)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37쪽.

60) 경제연구에서는 “상업부문에서는…… 수입상품들을 상업망에 넣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제4호, 8쪽. 이에 앞서 내각결정 24호(2003.5.5)는 현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쓰고라도 국가상업망을 통한 상품공급확대를 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상점에서의 수입상품 판매라는 고육지책을 통해 서라도 국가상점에 물품을 채워 이를 주민들에게 판매해 결국 주민들로부터 화폐를 환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임과 동시에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화폐유통의 공고화를 위한 기본방도는 …… 상품량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 (또한) 현금류통 조직사업을 잘 짜고 드는 것이다. …… 현금방출과 현금회수 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⁶¹⁾

유통계에서 유통되는 상품량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원래의 구매력을 해당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다. …… 우리 당은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고 상품보장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높아진 화폐의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⁶²⁾

상품유통은 화폐유통을 동반한다. …… 상업망들에 상품을 집중시키면 국가상업망을 통한 화폐유통량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상업부가금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더 많은 자금이 국가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 상업망을 통한 국가예산수입을 적극적으로 늘여나갈 수 있다.⁶³⁾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무역회사들에 넘겨 운영하게 하며, 특히 수입상품을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61) 최경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화폐류통 공고화의 기본방도,” 37~40쪽.

62) 강경희,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50쪽.

63) 선우련희, “사회주의적 상품공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008년 제4호, 26~31쪽.

둘째, 은행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유희자금을 흡수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이자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하고, 은행이 신용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상업개혁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재정금융기관들은 개인 수중에 있는 유희화폐를 국가 수중으로 최대한 동원하기 위하여 저금, 보험공간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한편⁶⁴⁾

저금 및 예금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예금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 저금 또는 예금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저금 또는 예금사업에서 신용을 지키는 것은 저금 또는 예금수입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저금 또는 예금한 돈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용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⁶⁵⁾

셋째, 기관, 기업소의 화폐거래를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 기업소의 현금 보유한도를 정해주고 한도를 넘어서는 현금 은 은행에 예금시키게 해야 한다.

오늘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64)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37쪽.

65) 홍영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006년 제4호, 28쪽.

하나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자기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하여서만 화폐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 보유한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여 적당한 화폐량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불가피하게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빨리 은행에 입금시키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중요한 것은 또한 …… 기관, 기업소들 사이의 화폐거래를 주로 무현금 결제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⁶⁶⁾

넷째, 외화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즉, 외화를 다루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과 지도, 통제하에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이 번 외화를 무역은행에 집중시키고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쓰도록 하며 국가의 통제 밖에서 외화거래를 하거나 외화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국내에서 외화를 류통시키거나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외화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는 것⁶⁷⁾

다섯째, 국가예산적자를 통화팽창에 의해 메우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지출이 유통화폐량의 증대로 이어지는 길을 최대한으로 막

66) 위의 글, 26~27쪽.

67) 고재환, “화폐류통을 공고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1년 제2호, 45쪽.

는 것은 통화조절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⁶⁸⁾

발권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통화팽창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⁶⁹⁾

3) 소유 문제

소유 문제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거의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 논문이 등장한다.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를 다루고 있으며, 종종 개혁개방 국가들에 대한 비판 논문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제연구』를 읽다 보면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개혁적 분위기 속에서도, 적어도 공식 문헌상에서는 북한 당국이 매우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분야가 바로 소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시장에 대해 다소 타협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도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서술방식이다. 단호함을 넘어서서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 북한 당국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불안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유의 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

68)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37쪽.

69) 양선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은행권의 발행과 그 규모규정방법론,” 『경제연구』, 1995년 제1호, 31쪽.

관·비난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유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소유 ‘다양화’에 의해 사회주의적 소유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국가소유’, ‘협동소유’, ‘집단소유’ 그리고 ‘공민소유’ 등 각이한 명칭을 띤 소유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 소유 ‘다양화’에 의해 출현하는 모든 소유 형태들은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형태물들이다. ……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소유 ‘다양화’에 의하여 세워지는 경제관리체제와 방법들은 ……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체제에 상응한 방법들 ……⁷⁰⁾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개혁’, ‘개방’의 간판 밑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사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⁷¹⁾

따라서 주변국들이 북한을 압살하려는 책동에 맞서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에서 적어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소유제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혹은 개혁 진행 과정에서 소유제 개혁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서 주되는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사회적 소유를 허물어보려는 책동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사회주의 사회의

70)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제1호, 46~48쪽.

71) 김순철, “‘수요공급설’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5년 제1호, 51쪽.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⁷²⁾

자본주의경제제도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며 그 위력의 원천도 집단주의에 있다.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킨다는 것은 곧 집단주의원리를 철저히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³⁾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허물어버리는 사소한 기들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⁷⁴⁾

다만 소유문제와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임대 문제이다. 예를 들면 1993년 시점에는 소유 다양화의 한 방식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시행했던 생산수단 임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었으나,⁷⁵⁾ 이후에는 임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은 자취를

72) 석두관,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1997년 제4호, 10쪽.

73) 박재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완성의 기본방향의 정당성,” 『경제연구』, 2003년 제2호, 9쪽.

74) 리봉학,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인민대중을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우월한 소유제도,”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12쪽.

75)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방식을 소유 확산의 중요 공간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임대방식은 자본주의적 경리방식이라는 것이다.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제1호, 46쪽.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다치지 않고 그 관리권만을 넘겨준다는 간판 아래 사회적 소유의 생산수단을 개별적인 기업체나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사회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며 자본주의적 관리에로의 지향이라고 비판하고는 했다. 박인덕,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와 발전의 본질적 내용,” 『경제연구』, 1993년 제3호, 27쪽.

감추어버렸다.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특히 7·1조치 이후 당국이 공장, 상점 등을 사실상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자료 발굴 사례 2: 이른바 변화

이 절에서는 주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이른바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북한 당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 경제운영방식 등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고민해보기로 한다.

1) 이윤

이윤의 사례는 『경제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중단분석을 시도해 이른바 ‘변화’의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경제연구』 내에서 이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해보는 것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기업의 경영활동결과를 평가하는 기준(혹은 지표)으로서의 이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연구』에서도 이윤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구절은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주의적 생산에서는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내었다고 하여도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에는 생산의 경제적 효과

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를 금액지표를 위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1988년).⁷⁶⁾

사회주의적 생산의 효과성기준을 이윤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1992년).⁷⁷⁾

이윤본위제는 우선 사회주의경제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될 수 없게 한다. …… 이윤본위제는 사람들에게 개인이기주의를 조장시킨다(1996년).⁷⁸⁾

자본주의적 방법은 이윤지표를 ‘만능지표’로 삼으며 현물지표는 이윤지표에 종속된다. 이윤지표를 ‘만능지표’로 삼으면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사용가치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 …… 이윤지표를 ‘만능지표’로 삼는 경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며(1998년)⁷⁹⁾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지표로서의 이윤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기업 계획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76) 김재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효과성 타산문제,” 『경제연구』, 1988년 제3호, 18쪽.

77) 한득보, “사회주의적 생산의 집약적 발전에서 생산의 효과성 범주,” 『경제연구』, 1992년 제2호, 10쪽.

78) 박경옥, “이윤본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옹계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996년 제2호, 50쪽.

79) 리명호, “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련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8년 제1호, 50쪽.

여러 지표에 자연스럽게 이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표로서의 이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 자체가 자취를 감춘 것인데 이는 『경제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업경영실적 평가 지표로서의 이윤의 중요성을 논할 때 대개는 실리주의라는 포장을 씌웠다.

실리주의로 나가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경제적 공간을 튼튼히 틀어쥐고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다. 실리보장에서 일군들이 경제적 공간을 틀어쥔다는 것은 원가와 가격, 이윤 등을 정확히 따지면서 타산을 바로 하여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실현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1999년).⁸⁰⁾

현 시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계획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더욱 개선 완성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질적 지표, 화폐지표의 계획을 증시하는 것이다. …… 계획과제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원가, 이윤 등과 같은 화폐지표를 홀시하게 되면 …… 경제적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나라와 인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줄 수 있다(2002년).⁸¹⁾

경영활동과정에 원가, 이윤, 생산액, 변수입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이용된다(2003년).⁸²⁾

80) 리상우, “상업의 최량성 기준과 그 리용,” 『경제연구』, 1999년 제4호, 33쪽.

81) 강응철,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제도체일주의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2년 제4호, 12쪽.

82)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27쪽.

물론 7·1조치 이후 기업 계획수행 평가 지표로서 ‘번 수입 지표’가 새롭게 등장한 사실로부터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번 수입 지표는 ‘이윤 + 임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것은 이후에 다시 새롭게 등장한 ‘사회순소득’ 지표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는 ‘번 수입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⁸³⁾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연구』 하나만 놓고 보면 2007년 이후부터는 사회순소득 및 순생산액, 특히 사회순소득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사회순소득은 “판매수입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로 규정되는데 이는 사실상 이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 계획을 줄 때 생산량만 주지 말고 이윤과제와 외화과제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김정일선집』 13권, 24쪽).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기 위한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실리지표인 사회순소득지표를 잘 이용하는 것이다(2008년).⁸⁴⁾

위의 글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앞에 내세워 사회순소득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로부터도 사회순소득이 이윤과 동일함을 암시받을 수 있다. 사회순소득이 이윤이라는 사실을 직접

83) <<민족 21>> 기자 출신인 이경수는 전 조선대학교 교수 강일천 씨가 자신의 인터뷰에서 “번수입 지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2쪽.

84) 최송렬, “사회순소득은 공업생산계획의 중요지표,” 『경제연구』, 2008년 제1호, 28쪽.

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이윤과제도 필요하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내세워 사회순소득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더욱이 이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계획사업에서 생산계획만 위주로 보면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 그때에는 계획과제가 주로 생산과 건설의 현물적 규모로만 주어지고 계획수행평가와 통제사업도 현물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경제활동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화폐지표들이 일부 설정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현물지표의 부족점을 보충하는 부속지표로 취급되었으며 많은 경우에 계산지표로 이용되었다(2007년)⁸⁵⁾

그러나 이제는 크게 변했다.

사회순소득계획을 현물생산계획과 같이 생산계획지표로 규정하여야 공업생산기업소들이 현물생산계획과 함께 생산순소득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울 수 있으며(2008년)⁸⁶⁾

화폐지표는 단순히 현물지표의 부속지표, 보조적 지표가 아니라 최소한 현물지표 정도의 중요성, 때로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

85) 정영범, “경제실리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계획사업개선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7년 제2호, 16~17쪽.

86) 최송렬, “사회순소득은 공업생산계획의 중요지표,” 『경제연구』, 2008년 제1호, 28쪽.

었다. 그리고 화폐지표 가운데 이윤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 그렇게 비난해 마지않던 바로 그 이윤지표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2) 가격

『경제연구』에서 가격 문제를 다룬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논문이기는 해도 모아보면 이 문제에 대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협동경리에서 수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자유수매 식료품과 농부업 생산물에 대하여 일원화, 유일가격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 자체로 정하게 하는 것…… 연합기업소안의 독립채산제기업소들 사이에 유통되는 자가소비용 생산물가격을 그들 자체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 직매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상품의 가격은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제정하는 소비품의 소비가격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직매점가격 제정대상은 공장, 기업소의 생활필수품직장이거나 가내작업반, 부업반들에서 부산물과 폐설물, 지방의 유희자재를 이용하여 계획 외에 생산한 소비품이다(1988년).⁸⁷⁾

1980년대 말 시점에도 국가의 유일적 가격체계, 즉 가격의 일원화 체계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시장가격이 적용되는 공간은 존재했다. 하

87) 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30~33쪽.

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계획 외 경제활동이거나 수공업적 생산품 등 주변부적 경제활동에 국한된 것이었다. 아래의 글에서 보듯이 1990년 대까지만 해도 시장가격, 가격자유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개혁’, ‘개방’의 간판 밑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사적소유로 전환시키고 국가의 유일가격제정원칙을 거세하고 ‘자유시장가격론’을 끌어들이으로써 경제의 자유화,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나섰다. ……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시장경제의 이론적 독소가 짙게 내포되어 있는 ‘수요공급설’의 현대판인 ‘자유시장가격론’을 받아들여 가격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나섰다. …… 우리는 앞으로도 노동가치설을 부인하는 온갖 부르주아 가치이론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 분쇄함으로써(1995년).⁸⁸⁾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 특히 7·1조치 이후에는 시장가격에 대해 종전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가격 결정에서 수요공급의 역할이 매우 크며, 가격은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내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 자신들이 부정했던 자유시장가격론을 상당 정도 수용한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노동가치설로부터 크게 후퇴하는 태도마저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명시적으로 자유시장가격론을 수

88) 김순철, “수요공급설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5년 제1호, 51쪽. 수요공급설은 상품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며, 자유시장가격론은 자유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오직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같은 글, 48~50쪽.

용한다고 내세우지는 않지만 ‘가격의 능동적 조절’이라는 표현으로 계획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을 암시하고 있다. 아래의 두 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비상품 가격수준은 생산자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다 반영하여야 한다. 생산한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그러한 소비품가격은 생산물의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 …… 아무리 많은 사회적 노동을 지출하여 만든 생산물도 값이 맞지 않아 팔리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으로 된다(2006년).⁸⁹⁾

가격은 사회적 필요로동 지출에 기초하면서도 제품의 쓸모와 인민경제적의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호상관계, 국가적 이익과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가격공간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가치법칙의 본래의 기능이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값은 높아지며 반대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은 상품의 값은 낮아지는 것이 가치법칙의 작용 밑에 이루어지는 가격의 운동법칙이다. 가격운동의 이러한 법칙은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 국가적으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생산물,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물생산을 늘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드는 것과 함께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그 생산을 늘이는데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2008년).⁹⁰⁾

89) 최경희, “소비상품가격체정의 출발점과 기준,” 『경제연구』, 2006년 제1호, 33쪽.

90) 김원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

3) 계획과 시장의 관계

『경제연구』에서 시장을 독립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 대부분 계획과 시장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다루고 있다. 물론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다룬 논문도 그리 많지 않다. 이 주제는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는 7·1조치 이후에야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과 판매를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이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자유판매를 실현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된 일부 생산물이 교류되는 몰자교류시장과 개인소비품의 일부만이 판매되는 지역시장만이 있을 뿐이다. …… 시장을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결합시키는 데서는 어니까지나 계획가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가격을 결합시켜나가야 한다(2006년).⁹¹⁾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계획경제와 시장의 올바른 결합이다. 이 경우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인정, 활용한다는 입장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장이라고 하

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8년 제1호, 40~41쪽.

91) 정명남, “집단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14쪽.

더라도 일부 생산재 시장(물자교류시장)과 일부 소비재 시장(지역시장)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계획경제가 기본이고 시장은 보조적 수단이며,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공식적 입장은 현실 세계의 모습과 큰 괴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⁹²⁾

이 경우 물자교류시장, 즉 생산재 시장은 국내사회주의시장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물자교류시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적이고 명문화된 지시에 의해 추진⁹³⁾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는 종합시장(지역시장)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즉, 종합시장의 경우 김위원장의 직접적이고 명문화된 지시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인지 『경제연구』에서는 종합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 사회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후 존재하는 국내사회주의시장은 그것이 출현한 초기부터 자본주의시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직시장이다. …… 생산수단 유통을 위한 국내 사회주의시장에 대한 주체의 이론 ……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직접 유무상통할 수 있는 물자교류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

92) 예를 들면 “지역시장 관리의 현 실태는 행정적성격의 한도가격설정이나 단순한 가격공시방법으로는 시장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37쪽 참조.

93) 북한 문헌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하면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여유 있거나 부족되는 일부 원료, 자재, 부속품 같은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시했음을 밝히고 있다.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104쪽.

에 맞게 상품화폐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었다(2002년).⁹⁴⁾

한편 종합시장에 대해서도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이 논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의 상점화’라 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 특히 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구절이 눈에 띈다. 다만 그 언급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상기의 물자교류시장과 대비되는 점이다.

상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시장을 통한 상업활동을 옹계 결합시켜나가기 위한 사회주의상업경영방법을 세워 시장이 인민생활향상에 직접적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업부문에서는 시장의 상점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세우고 시장판매방법을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하기 위한 대책과 시장가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2005년).⁹⁵⁾

한편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을 포함하는 더욱더 포괄적인 경제적 공간, 즉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이 관찰된다. 즉,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경제적 공간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가 붙어 그 의미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시장을 포함한 경제공간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94) 리장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류통령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2002년 제1호, 22~24쪽.

95) 주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제4호, 8쪽.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현 시기 경제관리에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가격, 시장, 수익성과 같은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들을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과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특성에 맞게 그 활용의 옳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들을 보조적 공간으로 하여 계획경제의 일시적인 공백을 메꾸는 방향에서 이용하는 것이다(2007년).⁹⁶⁾

4)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사례는 『경제연구』에서의 설명이나 주장을 여타의 문헌자료, 특히 과거에 발간된 공식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변화’의 문제를 추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연구』에서의 다음 서술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후퇴하게 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계획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결코 모든 계획지표들을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다 계획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계획지표들을 정확히 맞물리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사실상 계획화 사업의 유일성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는 국가계획기관들과 계획부서들 사이의 세

96) 리기성, “새 세기 우리 식의 사회주의 경제리론을 연구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7년 제2호, 11~13쪽.

부화지표의 합리적 분담에도 크게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1993년).⁹⁷⁾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전에 간행된 북한의 공식 문헌들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을까. 핵심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경제 분야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계획의 일원화란 전국에 뻗어 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가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형성해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기업 관련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이 직접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는 것이다. 즉,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의 부문 간, 기업 간, 지역 간, 이들 내부 상호 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구체적으로 맞물리게 함과 동시에 세부화된 계획과제의 수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방법이다.⁹⁸⁾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 부족과 자재공급의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가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기업은 계획 작성 및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가계획이 아니라 시장을 통한 기업활동도 크게 늘어났다. 기업 행동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시장화 및 분권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제와 함께,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던 계획의 일원화·

97) 안혁진, “생산체제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실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년 제2호, 26쪽.

98)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202~211쪽, 『경제사전』, 제1권, 331~334쪽.

세부화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제연구』 자신도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경제의 규모가 작고 구성부문들 호상간 경제적 연계가 단순했던 지난 시기에는 계획사업이 전적으로 중앙의 국가계획기관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비상이 강화된 오늘 종전의 낡은 틀에 매달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계획화하는 사업체제와 방법을 가지고서는 계획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2002년).⁹⁹⁾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실정을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여 국가 계획위원회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들,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고 해결하여야 할 중요지표들을 계획화하고 그 밖의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규격지표들은 해당기관, 기업소들에서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2007년).¹⁰⁰⁾

5) 대외무역과 자력갱생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진 분야의 하나가 대외무역 분야이다. 『경제연구』의 논문들도 대외무역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태는 과거의 문헌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에 간행된 공식 문헌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이 대외무

99) 강응철,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제도제일 주의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2년 제4호, 9쪽.

100) 정영범, “계획지표의 합리적 분담,” 『경제연구』, 2007년 제3호, 17쪽.

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국은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도 “자립적 민족경제는 결코 ‘폐쇄경제’도 아니고 대외무역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외무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대외무역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그 발전에 철저히 복무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입각해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¹⁰¹⁾

그런데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의 자원이 고갈되고, 전력도 모자라고, 특히 공장가동률이 극단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아울러 외화부족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대외무역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각종 생산의 물리적 조건, 생산비용 등을 타산해서 국내생산 혹은 해외수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종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더욱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주체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일이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 요구되는 설비와 기술을 100% 우리의 설비와 기술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비경제적이다…… 우리가 아직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소비품들은 무역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한다(2003년).¹⁰²⁾

101) 『경제사전』, 제1권, 464~465쪽.

102) 김명호, “무역경제정보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

우리 당은 변화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의 경공업제품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로 생산하고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올 데 대한 방침을 취했다(2003년).¹⁰³⁾

어떤 소비품이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재를 사다가 생산하는 것보다 완제품을 사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고 완제품을 사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은 수입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2004년).¹⁰⁴⁾

경제실리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부문구조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비싼 원료, 자재를 수입하여 전기를 많이 쓰면서 생산하는 것보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공업제품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오도록 경공업생산 부문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2008년).¹⁰⁵⁾

또한 자력갱생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 우리의 자력갱생을 철저히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것으로 되도록 하신 것……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요구,” 『경제연구』, 2003년 제1호, 34쪽.

103)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35쪽.

104) 최영옥,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34쪽.

105) 홍천봉, “현 시기 인민경제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8년 제1호, 16쪽.

오늘의 자력갱생이라는 말과 지난 시기의 자력갱생이라는 말의 뜻과 내용을 같이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철저히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할 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다. …… 떨어진 것을 창고 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실리를 보장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참다운 자력갱생 ……(2006년)¹⁰⁶⁾

5. 맺음말

『경제연구』에 대한 정독을 통해 발굴, 생산할 수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 및 학자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적절성·현실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북한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사안을 중시하는지, 어떤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개혁·개방과 관련된 정책과 이론, 이른바 변화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또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당화·합리화하고 있는지 그려볼 수 있다.

물론 북한경제의 현실, 실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부는 직접적으로, 또 일부는 간접적으로 경제 현실의 모습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경제 연구에 있어서 공식 문헌에 대한 정독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공식 문헌에 대한 접근은 그 중요성에 정비례해서 매우

106) 리창혁,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건설의 진로를 밝히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006년 제1호, 5~6쪽.

어려운 과정이다. 얼핏 보아서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대상들을 향해 다시 한 번 달려들어 가치 있는 자료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한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반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분야의 선행연구, 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섭렵이 중요하다. 아울러 풍부하고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¹⁰⁷⁾ 이것은 마치 멋진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집한 재료들을 잘 드는 칼로 조리하는 것과 같다. 물론 얼마나 재료가 좋은가도 중요하지만, 연구자가 결과물을 내는 데 잘 쓸 수 있는 칼(이론)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칼로 쓸 수 있는 이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¹⁰⁸⁾

공식 문헌에 대한 정독을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북한경제에 관한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해서 종종 연구자들을 좌절시키지만 약간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자료를 발굴, 생산해 연구를 진전시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접수: 6월 25일 / ■ 채택: 7월 24일

107) 북한 경제 연구의 이론, 분석틀, 시각에 대해서는 예컨대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위임, 『북한 연구방법론』(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3)을 참조.

108)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2004), 127~128쪽.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경제사전』,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경제연구』, 각호.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 한국 문헌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한연구방법론』(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3).

_____,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2005).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2004).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학위논문, 2003).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한연구방법론』(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3).

An In-depth Reading of North Korean Documents: A Case Study of *Gyeongjeyeongu* (Economic Research)

Yang, Moon-S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ethods of analyzing the North Korean official documents, through the case study of *Gyeongjeyeongu* (Economic Research), the professional North Korean journal in the field of economics. In particular, the paper seeks to discover ways to extract new information from the official documents. While these documents themselves give many data, through in-depth reading, the researcher could find and produce new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for a researcher to have the ability to extrapolate from a given document. Due to page limitations of this paper, the author does not cover all the contents of *Gyeongjeyeongu*; instead, the paper primarily focuses on the DPRK's economic policies related to its trend toward reform and openness.

To begin with, the paper introduces several basic steps for extracting

information from the official documents. First, through extrapolating from banned expressions, one could infer the state of the DPRK's economy. Second, while reading the documents, one should filter its claims with certain prudence and skepticism. Third,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keywords or clauses within the report. Fourth, certain word usages could be better understood only if they are 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 of North Korea's current situation.

Next, through several case studies, the paper shows methods of extracting and producing new information.

The first method is the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method one could better perceive the latest economic trend of the DPRK (its policies, objectives, etc.). While reading the *Gyeongjeyeongu* articles published in this decade, one could easily observe that their most frequently discussed topic is the expansion of the defense industries. This shows that the military complexes still play a critical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ext, the articles subtly reveal the regime's concern toward the state of its financial sector (decline of its revenues). They also show that while the North Korea regime takes a somewhat lenient approach on the market operation, it remains uncompromising on the issue of private property.

The second method is tracking the nature of "transformation"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ocuments. In other words, the paper explores producing/finding substantial data to analyze the change that have occurred in the DPRK's economic policies. As an example, the paper has sought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s in the regime's

perception of economic profit through in-depth analysis of *Gyeongjeyeongu*.

For a researcher, being able to find information hidden in the official documents is a very important task. While many researchers are frustrated by the shortage of documents available on North Korean economy, there are still ways to further develop the research if one takes little practice to learn how to extract and produce new data from these limited documents.

Keywords: North Korea, Official Documents, Economic Policy, *Gyeongjeyeongu*, In-depth Reading